

# 野 “박영선, 與 후보로 나서는 건 몰염치…출마 철회해야”



박영선 전 중소기업부 장관

국민의힘은 26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인정하는 결론을 내린 것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이 보궐선거 후보 공천 절차를 밝히 시작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온택트 정책워크

주호영 “단체장 성범죄로 하는 선거 후보 내지 말아야”

나경원 “박영선, 미안함 전할까 기대했는데 진실 회피”

조은희 “양심 있다면 시장 후보 내지 말자고 주장해야”

숍에서 “민주당은 광역 단체장 성범죄로 하게 된 보궐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만든 당헌에 따라 당연히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하는데 후보를 낸 것은 물론 선거 승리도 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의 뻔뻔함과 오만함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한다면 우리가 무슨

낮으로 내년 대선에서 표를 달라고 하겠다”라며 “어느 선거든 쉬운 선거는 없다. 죽을 각오로 임하지 않으면 당의 존립조차 지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들도 이날 출마를 선언한 박영선 전 중소기업부 장관이 박원순 전 시장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에 이어 인권위도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성희롱의 사실관계를 확실히 인정했다. 피해자는 여전히 절규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후보로 나서는 것만으로도 몰염치”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면서도 거이어나서서다면, 어찌 ‘그 사건’을 모른 척 할 수 있단

말인가”라며 “제가 기억하는 정치인 박영선이라면 조금은 다르지 않을까 생각했다. 같은 여성이기에, 민주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이기에 짧게라도 미안함을 전하지 않을까 기대했던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결국 듣지 못했다. 박 후보는 진실을 회피했다”며 “일말의 책임감과 미안함이 전혀 듣지 않나. 민주당 4선 국회의원을 지냈고 민주당 정권의 장관까지 지낸 후보로서, 짝막한 유감 표명도 그렇게 어렵고 힘든 것이었나”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조은희 서초구청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제는 ‘줄타기 인권위’가

되었다”며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범죄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성희롱’으로 결론 내면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처럼, 성범죄를 성범죄로 말하지 못하고, 성희롱이라고만 발표하는 민망한 줄타기 쇼를 보여줬기 때문이다”라고 비판했다.

또 “박영선 전 장관은 지금이라도 출마를 철회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여성 중진으로서 민주당이 성범죄자들 보우당이라는 오명을 씻고 거듭나고자 한다면, 한 점 양심이라도 남아 있다면 지금이라도 서울시장 후보를 내지 말자고 주장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취재본부김윤호기자

## 文대통령, 박범계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내일 임명 수순

전날 국회 보고서 채택 불발에 오늘까지 하루 시한 연장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결과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문 대통령은 오늘 낮 12시10분께 인사청문회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결과보고서를 1월27일까지 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일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裁可)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요청서 제출 20일 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지만, 이날 0시부터 제출 시한을 넘겼다.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국회에 청문 결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고, 기간 내에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국회 동의 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보고서 제출 기한을 단 하루 늘린

것으로 미뤄볼 때, 국민의힘 등 보수야당의 반대로 보고서 채택이 끝내 불발될 경우 문 대통령은 오는 28일 박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후 11시30분까지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으나, 야당 의원들이 박 후보자의 고시생 폭행 의혹과 지방선거 공천현금 사건 방조 의혹 등을 지적하면서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았다. 뉴스스



박병석 의장 예방한 김진욱 공수처장

김진욱 공수처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 소병철 “새 형사사법체계 선도자 역할·권력기관 분권화” 주문

박범계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근 열린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이뤄진 권력기관 개편과 새로운 형사사법구조의 변화에 대응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부여될 새로운 역할에 대한 주문이 나와 이목을 끌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구례·곡성갑)은 청문회가 시작하자마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과거 청문회 때마다 정책과 비전에 대한 검증

이 매년 뒷전으로 밀리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주질의에서 소 의원은 법무부장관에게 새롭게 부여되는 역할로서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의 조기 정착을 위한 선구자 역할, ▲권력기관 개편의 후속작업으로서 각 기관의 민주적 조직운영 원리 혁신과 분권화 등 2개의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질문을 던졌다.

먼저 이번 정부 들어 공수처 신설, 검찰의 직점수사 제한, 검·경 수사권 조정, 국가수사본부 발족,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 특칙 폐지 등 70년 만에

거대한 대변혁의 시대가 도래했다며, 법무부장관으로서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이 빠른 시간 내에 정착되고 효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이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소 의원은 큰 틀에서의 권력기관 구조개편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는 각 기관의 장에게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등 과거의 조직문화가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도 지적하면서, 민주적 조직운영 원리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동부취재본부김윤호기자

## 정 총리 “설 연휴 귀향·여행 자제…4차 대유행 악몽 피해야”

“금번 명절 무사히 넘겨야”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설 연휴 기간 중 가급적 고향 방문과 여행을 자제하시고, 이동과 접촉을 최소화해 주실 것을 국민 여러분께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의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서 벗어나 따뜻한 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금번 명

절을 무사히 넘겨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어렵고 힘들겠지만, 그래야만 상상하기 싫은 4차 대유행의 악몽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계란과 계란 가공품의 한시적 무관세 수입을 위한 안건을 심의한다”며 “관계부처는 성수품 방출물량 확대 등 설 장바구니 물가가 안정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택배종사자 과로 방지 대책에 노사정이 합의한 것을 두고는 “관계부처는 관계부처는 택배 분류설비 자동화와 거래구조 개선 등 후속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합의 사항의 이행을 뒷받침해달라”며 “또한, 택배 물량이 집중되는 설 명절 기간에 택배종사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자원인력 투입 등 ‘설 명절 성수기 특별대책’ 이행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취재본부김윤호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b>기사제보</b> (062) 222-2580	<b>광고문의</b> (062) 228-2580
----------------------------------	----------------------------------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